

## 청소년회관 및 근로자문화센터 綜合監査 結果 處分要求書

### 1. 청소년회관 처분요구서 일람표 (5건)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1	◦ 청소년 지도사업 추진 부적정 ⇒ 특정지역이 아닌 인천시 거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청소년회관	주의 (개선)		3
2	◦ 각종 행사예산 불용액 과다 및 집행 부적정 ⇒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계상	청소년 회관	주의		5
3	◦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 업무처리 부적정 ⇒ 부가가치세 징수 및 커피자판기 영업신고	청소년회관	시정 (주의)		7
4	◦ 미 반납 도서관리 소홀 ⇒ 도서관 운영규정 개정	청소년회관	개선		9
5	◦ 청소년 캠프 참가자 선정 부적정 ⇒ 중복 선정 지양	청소년회관	주의		11

### 2. 근로자문화센터 처분요구서 일람표 (4건)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1	◦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관리금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중·장기 수선계획 수립·시행 ⇒ 재난대상시설 총체적 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문화센터 소방안전본부	시정 (개선)		14
2	◦ 근로자 사회교육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 강사 재위촉 근거와 평가기준 마련·시행	근로자문화센터	개선		19
3	◦ 교육과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동일과목 재수강 지양	근로자문화센터	개선		23
4	◦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강구	근로자문화센터	권고		25

[ 별첨 1 ]

## — 청소년회관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청소년회관

[행정상 조치] 주의(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청소년 지도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청소년 회관에서는 보충심화 및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을 보완하고자 저소득층 자녀를 상대로 예산 181,455천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네발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기초수급, 차상위,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중학교 1~2학년 학생 중 40명을 선정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수업 종료후부터 20시30분까지 각종 학과 보충 수업 및 취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계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석식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각종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원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학교 학생에 한하여 선발함으로써 인근 부평구 등에 거주하는 학생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2008년 대상자 41명 전원이 남동구 소재 학생으로 운영 되고 있어 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청소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다양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치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송의동 소재 청소년 회관에서는 지역내 저소득 중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알찬마루」를 총사업비 171,042천원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회관 소재지인 남구 송의동 인근인 중구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청소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구 거주 학생의 경우 참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동구의 경우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남구거주 학생에 한하여 모집·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적정치 않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교과활동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이해 증진과 정서 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청소년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학교는 여름 문화학교, 가을문화학교, 전통예절 배우기 등 3개과정에 290 여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문화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강사료 5,400천원만을 예산에 편성하여 방학특강 및 학기별 취미 교양교육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전통문화 학교에 대한 전문성과 예절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요원 등을 확보하여 배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청소년 지도사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청소년 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지역이 아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중 청소년 관련 시설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청소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청소년회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청소년회관 각종 행사예산 불용액 과다 및 집행 부적정

## [위법부당내용]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과 결산 간의 큰 차이를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에서는 2007년도에 가족사랑 캠프 행사를 개최하고자 관련 예산 2,950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 중 269천 원만 집행하고 총예산의 90.8%인 2,680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이는 정리 추경 등에 삭감 등의 사유 발생하면 삭감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이행치 않는 등 총 8건의 청소년 지도사업 행사 예산이 30%이상 불용처리 되었는데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는 등 청소년 지도행사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각종 청소년 지도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청소년회관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징수누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2007.1.1 시행)으로 그동안 면세되었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부동산 임대업) 및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2007년부터는 공유재산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에서는 사용허가 한 자동판매기 사용료에 대한 110천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누락 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지시감독 소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대부받을 자 간의 자동판매기 허가조건 제17조에 의하면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에서는 시설 내 커피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지시 감독하

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3대의 커피자판기 영업신고가  
누락된 채 운영중인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공유재산 임대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징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영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커피자동판매기  
3대에 대하여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청소년회관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미 반납 도서관리 소홀

####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자료대출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 자료의  
반납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출  
자료의 반납촉구는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료 반납 독촉은 문자메세지, 전화 및 공문발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의 경우 감사당일 현재까지 최단 4일에서  
최장 458일이 되도록 미 반납된 도서가 37권이고, 2007년의 경우  
2회(7월, 12월) SMS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독촉하였으며, 2008년의  
경우에도 2회(5월, 7월) 독촉한 사실이 있고, 2007년 미 반납 도서의  
경우 미반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 반납독촉을 하였으며,  
2008년의 경우에도 미반납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난 뒤에  
반납독촉을 하여 최초 독촉시기가 너무 늦어 반납율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에서 연2회 이상 독촉하도록 내부  
방침으로 정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는  
부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보완이 필요하며, 미 반납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반납독촉을 하여야 하며, 일제 독촉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미 반납일로부터 빠른 시일(7일)내에 반납독촉을 하도록 하고, 일제 독촉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청소년회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청소년 캠프 참가자 선정 부적정

###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에서는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정서와 사회성 함양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군·구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보육원에서 추천받은 학생과 소년·소녀가장, 일반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캠프와 겨울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캠프 참가자를 선정할 때는 비록 형편이 어려운 보육원 및 저소득층 청소년 위주로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며, 또한 매년 중복참가자는 없는 지 살펴보아야 하고, 더 이상 참가 대상자가 없을 때 중복 참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참가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에서는 2007년 여름캠프 참가자 38명 중 3명이 2007년 겨울캠프에 중복 참가하게 선정하는 등 청소년 캠프 참가자 선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균등하게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하게 중복 참가자를 선정할 때는 더 이상 참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시키기 바랍니다.

[ 별첨 2 ]

---

- 근로자문화센터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근로자문화센터, 소방안전본부(예방안전과, 재난관리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1. 공동관리금 관리 시스템 미비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인천시 소재 각 기업체에 근로하는 미혼 여성들을 위하여 설립된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대료 및 보증금과는 별도로 각 세대별로 상·하수도, 전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정화조 청소, 물탱크 청소, 세대별 방역·소독, 수질검사 비용(이하 “공동관리금”) 등을 징수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공동관리금을 징수함에 있어 일부세대는 공동관리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일부세대는 사감을 통하여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이를 담당자가 매일 통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방역, 정화조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업체로부터 청구된 금액을 담당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비록 공동관리금을 세외수입으로 관리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공동관리금 통장과 세대별 징수내역, 관리장부 등을 대조한 결과 입금 및 지출내역이 차액이나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공동관리금을 관리함에 있어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청구서, 지출원인행위, 계좌입금 영수증 등)를 갖추고, 입금내역에 대하여도

매월 세대별 징수내역, 통장잔고, 장부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득하도록 하는 등 공동관리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이 요구됩니다.

### 2. 장기 수선계획 미비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 집중난방 공동주택(임대아파트 포함) 등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공동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특히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일정액(총 건축비의 1만분의 4 이상)을 적립하고 이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2006년 및 2007년 화장실 보수공사(각각 30세대 및 70세대)와 외벽 도색공사 등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소방시설 보수공사(1천만원), 외벽 균열 보수공사(1천만원) 등의 유지보수 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8월~9월 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바, 비록 동 아파트는 100세대(50세대 2개동으로 1세대당 2인 거주)이므로 위 법령에 저촉되는 아파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용 후 24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축물로서(사용년도 1985년)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함이 요구됩니다.

특히 동 아파트는 5층으로 내·외벽의 균열이 심하여(2006년 특정 재난시설로 C 등급 판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음) 우기 시에는 천정에 비가 새는 등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지금까지 예산부족으로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금년 확보된 예산도 장마철에 앞서 조기 집행하지 않고 공사일정을 8~9월로 계획함으로써 거주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3. 소방시설 보강에 관한 사항

위 법령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5층 이상,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특정소방대상시설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지상 5층, 연면적 3,793 제곱미터로서 특정소방대상시설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소화설비는 자동식 소화기와 옥내소화설비(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로 대체 가능)를 갖추어야 하고, 경보설비는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피난설비는 3층 이상인 경우 피난기구(완강기 등)와 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동 아파트는 피난계단(동별로 2개씩 설치), 복도·비상구 등의 유도등과 수동식 소화기 50개 및 세대별로 누전차단기를 갖춘 외에는, 자동식 소화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비상경보 또는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피난기구 및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시설을 보강함이 요구됩니다.

**\*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민간위탁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조치 요망**

### 4. 특정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자치단체장)은 매년 재난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을 하고 연2회(상·하반기) 이상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2007년 5월 및 11월과 2008년 6월 근로자 임대아파트(\* 2006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 C등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본부에 제출하였는바,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P형 1급 수신기 및 발신기 화재감지기 노후, 4,5층 상층부 균열발생” 등으로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년 예산을 확보, 하반기 중에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재해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축·배포한 재난관리통합시스템(NDMS)으로 관리·운영하고 있고, 더욱이 동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등급, 관리책임자,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 등 종합적인 관리실태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 기간 중에 동 시스템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록·관리실태를 살펴본 결과 위험등급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관리책임자는 1999년 당시 담당자였던 “행정주사 ○○○”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기타 장·단기 위험해소계획, 재난대비체제,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상황, 주변환경 등), 위치도 및 전경관련 사진 등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특히 동 건에 대하여 감사 기간 중에 소방방재본부 및 서구청 등 관련기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NDMS 시스템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시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검토한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등급평가는 재난관리과 주관으로, 안전점검은 예방안전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대상시설별 안전관리 책임기관 지정 및 책임한계 등 관련 지침 미비 또는 관련 규정에 대한 기관별 상이한 해석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관련업무 일원화와 함께 대상시설별 관리책임 기관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 관련부서 및 산하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처 분 요 구]

### 1. 근로자문화센터장은

근로자 임대아파트 공동관리금 관리와 관련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시기 바라며,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대한 중·장기 수선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소방서장(119센터)와 협의,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소방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되, 귀 센터의 예산 및 민간단체 위탁 추진 상황을 감안, 단계적 보강계획을 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방안전본부장(예방안전과장, 재난관리과장)은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재난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리책임 기관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기록·관리도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동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근로자문화센터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근로자 사회교육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 ○ 2008 근로자 사회교육 강사 현황

- 강사인원 : 32명
  - 전문교육반 : 7명(컴퓨터1, 영어 2, 일본어 2, 중국어 2)
    - \* 7명 모두 재위촉
  - 창업자격증반 : 7명(생활양재, 헤어미용, 반찬요리, 웰빙요가, 독서지도 등)
    - \* 2명 신규위촉(생활양재, 금융재테크)
  - 취미교육반 : 8명(도자기, 양재, 종이조각일러스트, 홈패션, 제과·제빵 등)
    - \* 8명 모두 재위촉
  - 취미그룹 지도반 : 9명(사물놀이, 훌스케치, 스포츠댄스, 요가, 피아노 등)
    - \* 1명 신규위촉(밸리댄스)
  - 외국인 근로자 교육 : 1명(한국어 교실)
    - \* 재위촉

### [위법부당내용]

1. 근로자 사회교육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 재위촉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대부분의 강사를 재위촉하고 있으며, 재위촉을 위한 강사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2조 및 「근로자 문화센터 강사채용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회교육 강사를

매년 위촉 또는 재위촉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위촉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도, 2008년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강사를 임의대로 재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강사를 재위촉함에 있어서도 강사들에 대한 평가 및 수강생들의 설문 등 재위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위촉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이 요구됩니다.

## 2. 강사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 서류심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심사위원 임의대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잃는 결과 초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근로자 사회교육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방법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서류심사는 객관적인 평가로써 평가항목을 경력, 자격증, 전공 및 기타항목으로 나누되, 경력은 4년이상 3점, 2~3년은 2점, 1년미만 1점으로, 자격증은 교사자격 2점, 기사·기능사 1점으로, 전공은 해당분야 2점, 유사분야 1점으로, 기타 관내거주자는 1점, 수상경력 1점 등으로 총 1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면접심사는 강사로서의 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상·중·하로 나누어 총 12점 만점으로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자문화센터의 2007년 및 2008년 강사 선정을 위한 심사실태를 살펴본 결과(\* 심사위원은 소장, 관리담당 및 사업담당 3인으로 구성·운영),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심사위원 모두 대부분의 강사들에 대하여 경력, 자격증, 전공 및 기타 항목의 점수를 차이가 나도록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 서류심사 배점 부적정 사례 ]

#### 1) 생활양재 강사모집 신청자 ○○○의 경우

- 경 력 : 2004.3 이후 현재까지 강사경력 보유 ⇒ 경력 4년 이상 3점
- 자격증 : 양장 기능사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 3점
- 전 공 : 송의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 학과 졸업 ⇒ 2점
- 기 타 : 인천지방경기대회 양장부문 금메달 수상 ⇒ 1점으로 총 9점

#### \* 심사위원별 배점 내역

- 소 장 : 9점(경력 3, 자격증 3, 전공 2, 기타 1) ⇒ 기준으로 배점
- 관리담당 : 8점(경력 3, 자격증 3, 전공 1, 기타 1) ⇒ 기준으로 미부여
- 사업담당 : 8점(경력 3, 자격증 3, 전공 2) ⇒ 기준으로 미부여
- \* 사업담당은 팀장부재로 기능8급 이점범 대체

#### 2) 생활양재 강사모집 신청자 ○○○의 경우

- 경 력 : 2004.3 이후 현재까지 강사경력 보유 ⇒ 경력 4년 이상 3점
- 자격증 : 양장 기능사, 한재교사 자격증 취득 ⇒ 3점
- 전 공 : 배화여자전문대학 전통복식과 졸업 ⇒ 1점(유사전공)
- 기 타 : 인천거주(부평2동) ⇒ 1점으로 총 8점

#### \* 심사위원별 배점 내역

- 소 장 : 6점(경력 2, 자격증 1, 전공 2, 기타 1) ⇒ 기준으로 미부여
- 관리담당 : 7점(경력 2, 자격증 2, 전공 1, 기타 2) ⇒ 기준으로 미부여
- 사업담당 : 8점(경력 3, 자격증 3, 전공 1, 기타 1) ⇒ 기준으로 부여
- \* 사업담당은 팀장부재로 기능8급 이점범 대체

### [처 분 요 구]

#### 1. 근로자 사회교육 강사 재위촉 근거와 강사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강사 선정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근로자문화센터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교육과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근로자 사회교육 현황

구 분	운영과정	수강인원	교육기간	비 고
전문교육반	7개반	175명	3개월	
창업및자격증반	9개반	255명	“	
취미교육반	8개반	170명	“	
취미그룹지도반	9개반	195명	“	

[위법부당내용]

○ 근로자문화센터는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의 복지·문화활동 지원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문교육, 창업 및 자격증, 취미교육, 취미그룹지도 등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용은 그 교육의 목표, 프로그램의 난이도, 교육생의 수강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 및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전문교육반, 창업 및 자격증반, 취미교육반, 취미그룹지도반 등 근로자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전문교육반의 중국어·영어·일어반 등 외국어교육과정, 창업 및 자격증반의

헤어미용·독서지도사반 등 자격증 취득과정의 경우는 교육목적 및 과정의 특성상 일반 취미교육과는 달리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과정일 것임에도 일반교육과 동일한 교육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문교육반 및 창업 및 자격증반의 일부과정은 취미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을 달리 정하여 교육의 성과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 및 헤어미용 등 전문교육의 일부 수강생의 경우 동일 과정을 계속하여 3회 이상 수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수강생 개인이 학습효과를 위하여 재수강하는 경우라 할 것이나 이로 인해 신규 수강생의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니 교육기간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동일과목 재수강을 제한하여 신규 수강생의 교육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3기 교육생 모집부터는 동일과목 3회이상 연속수강을 불허 하고 있음.)

## [처 분 요 구]

1.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근로자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교육생의 동일과목 재수강을 지양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근로자문화센터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근로자 사회교육 현황

구 분	운영과정	수강인원	교육기간	비 고
전문교육반	7개반	175명	무 료	
창업및자격증반	9개반	255명	“	주간 3개반 85명
취미교육반	8개반	170명	“	
취미그룹지도반	9개반	195명	“	주간 1개반 20명

## [위법부당내용]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는 1984년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개관하여 2004년도 수혜대상을 근로청소년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근로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의 복지·문화활동 지원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문교육, 창업 및 자격증,

취미교육, 취미그룹지도 등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1. 근로청소년 정신교육, 2. 근로청소년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 3. 근로청소년의 직업보도 및 부업알선, 4.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5. 근로청소년 복지시설 및 취미교실 운영, 6. 기타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운영하면서 동 시설 및 강좌 교육에 따른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였으나, 근로자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센터 운영방향을 근로자(청소년)의 자활이 아닌 소양 및 취미교육을 통한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였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강료의 징수근거는 마련되었다 할 것입니다.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기관인 여성복지관 및 여성의 광장 등에서 전문교육, 창업교육, 자격증 교육, 기타 교양교육 실시에 따른 수강료를 수강생들에게 일정금액 징수(과정당 월 2만원 수준)하고 있는바 무료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여타 사회교육기관과의 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며, 동 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4기 및 2008년도 1기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현재대로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80%이상의 답변(수강료 징수시 금액은 1만원이 20%)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강생들에게도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교육생에 수강의 책임을 더해 교육 참여 및 집중력 증대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근로자 사회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방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 [처 분 요 구]

1.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당해 교육시설이 공단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하나, 위 시설의 이용대상이 직접소득이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여타 사회교육시설 이용자와 차등이 없는 바 이를 계속 하여 무료로 운용한다는 것은 이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현재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유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